

# “광주·전남 수해지역 이번주 재난지역 선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세균 총리,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 당정 협의회, 재난지원금 2배 올리고 추경 편성은 보류키로 예비비·구호기금 총동원...소하천·독·제방·저수지 정비도

당정청은 수해 등 재난으로 피해를 봤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액수를 2배로 상향 조정하고, 재정 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 여부는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강중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

향 조정하기로 했다”며 “다른 보상 기준도 상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필요성을 제기한 4차 추경예산안(추경)안 편성의 경우 현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 상황이라는 판단 아래 결정을 유보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 복구 비용은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충당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강 대변인은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는 예산 3조원에

플러살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4000억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추가적으로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5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어 재정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추가 수해 피해를 본 곳에 대해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최대한 빨리 선포할 방침이다. 현재는 7곳이 지정된 상태다. 강 대변인은 “광주, 전남, 전북, 경남 등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지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또 “당·정·청은 이번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가능한 모든 재원을 동원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예비비 등을 동원하고 지원 복구 공사 중 지출 요소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소하천을 포함해 독과 제방, 저수지에 대한 항구적인 정비 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부수석 이 각각 참석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靑, 노영민 유임 속 참모진 개편 마무리

### 한달간 15명 중 7명 교체...5명 수석 중 다주택자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민소통수석과 사회수석을 임명, 최근 사의를 표명한 6명의 고위 참모 가운데 노영민 비서실장만 일단 유임시키고 모두 교체했다. 이는 최근 한 달간 수석급 이상 참모 15명 중 절반에 가까운 7명을 교체한 것으로, 속도감 있는 인선을 통해 부동산 정책 논란 등에 따른 민심을 수습하며 국정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최근 임명된 새로운 청와대 고위 참모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최재성 정부수석, 김중호 민정수석,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김재남 시민사회수석, 윤장렬 사회수석 등이다. “3실장-8수석-2보좌관-2차장” 체제에서 1명의 실장과 5명의 수석, 1명의 차장

이 바뀐 것으로 노영민 비서실장을 제외하고 청와대가 제3기 진용을 갖겠다는 평이다. 신임 수석들의 임명에 맞춰 각 수석실 산하 비서관 교체 정도가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노 실장의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면서도 “이번 인사는 최근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이뤄진 일괄사퇴의 후속 조치”라며 추가 인사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시사했다. 노 실장은 가을 정기국회 또는 연말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견해가 주를 이룬다. 한편, 최근 발표된 5명의 수석은 모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다. 지난 1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최재성 정부수석은 무주택

자, 김중호 민정수석과 김재남 시민사회수석은 1주택자다. 또 이날 발표된 정만호 국민소통수석과 윤장렬 사회수석은 당초 2채의 집을 소유했으나, 1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다주택자 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1주택 외 주택 처분”이라는 청와대 방침에 따른 인사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일련의 인사 발표를 보면 공직사회 문화가 바뀌고 있음을 아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김상조 정책실장, 이홍승 경제수석 등이 자리를 지킨 점은 “반쪽 쇠산”이라는 평가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민심 이반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8·29 민주당 전당대회에 맞춰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등을 포함한 추가 인선과 개각 카드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 “2025년 전기차 113만대 달성” 민주당 K뉴딜외 고양서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미래전략 K뉴딜위원회는 12일 경기도 현대자동차 체험·전시관(현대모토스튜디오)에서 간담회를 열고 미래차(전기·수소차)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는 “친환경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조기에 열어 그린뉴딜을 구현하려면 긴밀한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우리 기업이 미래차 시장을 선도하도록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총동원하겠다”며 “2025년에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누적 보급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미래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3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저공해 차량’ (혜택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2022년부터는 공공부품 차량 구매를 모두 전기·수소차로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정부 ‘4대강 합동조사단’ 구성

### 환경부·국토부·민간 전문가 구성 보 홍수 조절기능 평가

정부가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을 조사하기 위해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계기로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관련 조사를 나설 계획이다. 홍수 관련 업무 중 물관리 부분은 환경부에서, 하천 시설 관리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한다. 이에 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해 4대강 사업이 실질적으로 홍수 조절에 도움이 됐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하자 여야와 시민단체는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라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게 조사·평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과 큰 연관이 없다고 밝혔고, 2014년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는 홍수 위험이 줄었지만 계획에는 못 미쳤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던 이후인 2018년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기능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당권 후보 선거운동 기회 최대한 부여”

### 민주, 김부겸 측 ‘호남 연설회 취소 제고’ 요청에 일정 보완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부겸 후보가 폭우로 호남·충청 지역 합동연설회와 TV토론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제고를 요청하자 당이 “선거운동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일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김부겸 후보 선거캠프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호남과 충청지역 합동연설회와 TV 토론회 전면 취소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홍철 당 선관위원장 겸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내 의견을 반영해 후보들에게 선거운동 기회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려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내주 광주를 비롯, 연기됐던 대의원대회 일정을 진행할 때 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들이 현장에 참여해 인사말을 할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연설회만큼 길게 시간을 주지는 못해도, 최대한 충분히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통합당 “호남 목소리 듣겠다”

### 국민통합특별위 구성...위원장에 전주 출신 정운천 내정

미래통합당은 12일 비상대책위원회 직속 국민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장에 전북 전주 출신의 정운천 의원을 내정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조만간 공개 사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입장 표명 시점은 아직 미정인 상태지만 다음 주 광주를 방문, 국민통합을 강조하는 대국민메시지를 발표하면서 담기지 않겠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아직 수해 피해가 계속되고 복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기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사과는 13일 예정된 당 정책 개혁안 발표 등과도 무관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강정책 개혁안에는 임시정부 인적, 5·18정신 포함 등이 담길 통합을 강조하는 대국민 메시지도 발표

할 계획이다. 이번 가운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조만간 공개 사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당 쇄신을 강하게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의 입장 표명 시점은 아직 미정인 상태지만 다음 주 광주를 방문, 국민통합을 강조하는 대국민메시지를 발표하면서 담기지 않겠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아직 수해 피해가 계속되고 복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기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사과는 13일 예정된 당 정책 개혁안 발표 등과도 무관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강정책 개혁안에는 임시정부 인적, 5·18정신 포함 등이 담길 통합을 강조하는 대국민 메시지도 발표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알고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 상 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대 출 한 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 출 금 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청단지점 576-4150